

기후변화의 영향 및 우리의 대응 방향

박 천 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과장

Climate Change ; Its Impacts and Our Strategy to Address It

Chun-Kyoo Park

Climate Chang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1. 서 언

2008년 12월 1일~12일간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큰 성과없이 말의 성찬으로 끝났다. 그러나 동 회의는 2009년 6월까지 post-2012 체제를 위한 협상초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일정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이슈가 바로 우리나라 경제 및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흔히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네가지 요소, 즉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기술(technology) 및 재원(financing)이 중요하다고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CO₂)로 대표되는 6종의 온실가스를 “감축(mitigation)해야 하고,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대기 중에 누적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서 분해되기 위해서는 수십 또는 수백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기후변화에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은 획기적인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을 필요로 하며, 많은 재원 동원(financing)도 요구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은 산업활동 등 경제행위에 지장을 주고, 일상생활에서도 전기, 가스 등의 사용패턴에서 변화를 요구하며, 교통수단의 이용 방식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 탄소펀드 등 금융상품의 개발 및 재해 증가에 따른 보험제도 등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피할 수 없는 기후적응과정에서 재해 예방비용이 들고, 농업 생산량 감소, 온난화에 따른 말라리아 등 열대 질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사회·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를 유발한다. 특히 2007년 12월 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발리로드맵에 따라 2009년까지 국제협상을 거쳐 2013년 이후의 체제를

마련할 것이며, 동 체제에서 OECD국가인 우리나라는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을 안아야 된다.

이러한 ‘위기’에 수동적으로만 대응할 경우 우리나라의 지속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요원해질 것이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녹색성장의 길로 전환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향상되어 앞으로 우리와 후손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2. 기후변화 현상 및 영향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를 “인간 행위로 인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먼저 기상(weather)과 기후(climate)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기상은 단기간의 날씨 등을 말하며, 기후는 장기간의 평균적(average) 기상학적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장기간의 추세 또는 평균적 변화를 의미한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은 온실가스(greenhouse gas)라고 부른다. 지구 대기(atmosphere)의 대부분은 질소(78%) 및 산소(21%)로 이뤄져 있으며, 나머지 1%를 구성하는 것이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다. 바로 이렇게 1%를 구성하는 이산화탄소 등이 온실가스이며, UN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와 육불화황(SF₆)를 직접 온실가스로 정의하고 있다.

사실 온실가스가 없으면 지구는 너무 추워 인간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우주로 나가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적외선)는 흡수하여 그 열을 지표면으로 다시 내보냄으로써 마치 온실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Dessler & Parson은

E-mail: ckpark91@me.go.kr

Tel: 02-21107714

Fax: 02-504-5445

지구 대기가 질소 및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지구 온도는 평균 -20°C 가 되나 1%도 안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평균기온 $+15^{\circ}\text{C}$ 의 유지로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이에 따라 20세기 이후 지구의 평균온도가 계속 높아져 가는 것이 문제다. 2007년 2월부터 발표된 IPCC 4차 평가보고서는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지구평균 온도는 0.74°C 가 올라가고, 해수면은 0.7 m 상승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지구 기온이 상승한 것은 인간의 행위(화석연료 연소)가 원인이 될 가능성을 90% 이상(very likely)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대기뿐만 아니라 해양,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 등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기후변화의 원인을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가능성의 형태로 표현하며, 전 세계 2,5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검토한 IPCC보고서에서는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의 행위가 기후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하여 사실상 기후변화 원인에 대한 과학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관측데이터를 토대로 지구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1978년 이래 위성자료를 분석하면 극지방의 얼음은 지속적으로 감소(10년간 평균 2.7% 감소)하고 있으며, 북반구·남반구 모두 산악지방의 빙하 및 적설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진행된 원인으로 산업혁명 이전인 175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 ppm이었으나, 2005년에는 380 ppm으로 증가한 것을 예시하고 있다. 즉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와 지구 기후온난화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온실가스는 화학구조의 안정성으로 인해 분해가 되지 않고 수십년 또는 수백년간 체류하게 되며 앞으로도 세계적 경제개발의 지속으로 화석연료 사용량(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4°C , 해수면은 59 c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해안 저지대는 바닷물에 잠기게 되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 전 지구적 재앙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물론 남태평양 투발루 등 군소도서국가는 이미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빙하의 해빙으로 홍수 등이 일어나거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가뭄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1°C 도 되지 않는 지구평균 기온의 변화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온상승이 일어날 경우 우리 인류에 미칠 재앙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지구기후의 변화는 자연재해 외에도 생물종의 멸종 가속화 등 생태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농·수산업의 변화(사과 재배지 북상, 한대성 어종의 감소), 열

대성 질병의 확산 등 보건 부문의 영향, 관광·레저의 변화 등 경제·환경·보건 등 모든 부문에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기온도 6대 도시에 한정되기는 하나 지난 20세기 동안 지구 평균보다 2배인 1.5°C 상승을 보였으며, 해수면도 제주도 인근지역의 경우 지구 평균보다 3배 정도 더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 태풍 등 자연재해의 피해규모는 1990년대에 비해 4배가 증가하였고, 전국의 열대야 일수도 평균 2~4배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지성 호우의 증가와 수시로 변하는 기후현상으로 일기예보의 부정확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 기상과학의 발전에 비해 여름철 기상현상의 변화 정도가 심하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기상현상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3. 국제사회의 노력 및 향후 협상 전망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정상회의(UNCED)”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부속서 I 국가)에게 1990년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선진국의 구체적 감축목표 등을 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는 38개 선진국에게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였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국가별로 다른데 일부 국가는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량이 증가해도 되는 국가도 있다. 또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축성 체제를 도입하였다. 즉 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및 공동 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가 바로 그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에 가격을 붙여 탄소 감축비용이 많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EU-ETS)가 대표적이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술이전 또는 투자를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감축한 분량을 선진국이 감축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며,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간에 이뤄지는 CDM사업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교토의정서는 1차 공약기간(2008~2012년)의 감축량만을 정하고 그 이후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3)에서는 2013년 이후의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틀을 마련하자는 발리로드맵(Bali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 발리로드맵은 2013년 이후에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토록 큰 틀을 제공하였다는 1차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교토

의정서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발리로드맵은 협상의 틀로서 두가지 트랙을 설정하였다. 즉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장기협력에 관한 작업반(AWG-LCA)”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감축 작업반(AWG-KP)”에서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발리로드맵에 따른 의제를 협상하는 방식이다. 동 작업반의 협상은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15차 당사국총회까지 완료기로 합의하였고, 주요 의제는 감축, 적응, 기술 및 재원이다.

발리로드맵 중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한 것은 장기협력작업반(AWG-LCA)의 활동이며, 동 발리행동계획에서는 교토체제인 선진국 의무방식만이 아닌 개도국의 참여도 규정하였다. 따라서 post-2012체제에서는 모든 국가의 참여를 의도한 포괄적인 협상 프로세스로서 미국과 개도국의 감축문제를 협상의제로 삼고 있다. 또한 유연한 체제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었다. 즉, 기후변화 대응시 국별 경제·사회적 여건의 반영 필요성이 강조되고, 선진국은 노력의 상응성(comparability) 조건하에 비수량적 감축도 허용하고, 개도국의 참여와 관련하여 측정·보고·검증가능성(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감축 행동을 인정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아울러 부문별 접근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리로드맵에 따라 2008년에도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가 커 2009년 말까지 협상이 종료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선진국은 그들만의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개도국 특히 선발 개도국의 일정량 감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선진국이 산업혁명 이후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대기중으로 배출한 역사적 책임이 있고 개도국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개발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먼저 고통스런 모범을 보여주면 나중에 개도국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특히 선진국 중에서 미국이,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 및 인도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미국 Obama 대통령 당선인은 부시 정부와는 달리 세계적 에너지 위기 해소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명분론적 차원에서도 2020년까지 1990년대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2050년까지는 1990년에 비해 80%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어 향후 미국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사회 구조상 획기적 기술개발 없이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미 의회의 동의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반면 선진국 중 EU는 2020년까지 1990년에 비해 최소 2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여타 선진국 및 개도국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EU 역내 국가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에 부담금

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나아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기준을 신설하여 EU 역내 국가 생산 차종뿐만 아니라 EU에 수출하려는 회사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결국 EU는 앞선 기술력을 토대로 기후변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저탄소 지속발전을 달성하면서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차이를 감안할 때 post-2012체제에 대한 협상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협상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양자 차원에서 무역규제 또는 상계 관세 등의 부과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실시할 경우이다. 비록 지난 6월 미 상원에서 폐안은 되었지만 Liberman-Waner법안은 전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규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유럽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4.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591백만 CO₂톤이며, 이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국의 기준년도인 1990년에 비해 98.7%가 증가한 양이다. 거의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에너지 부문이 84.4%, 산업공정이 11.0%, 농업이 2.7%, 폐기물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배출량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중 발전 분야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구조를 볼 때 단기간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경제(low carbon economy)’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발전부문을 최종 수요처로 나눠서 살펴볼 때 가정,

Table 1.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90~'05		
					비중	증가율	
총 배출량	297.5	451.9	527.6	591.1	100	98.7%	
에너지	소계	247.8	372.1	438.5	498.6	84.4	101.2%
	발전	38.0	83.2	125.9	165.0	27.9	350.3%
	산업	87.6	133.5	153.1	156.9	26.5	79.1%
	수송	42.4	77.2	87.1	98.2	16.6	131.6%
	가정,상업	67.2	70.4	64.0	61.6	10.4	△8.3%
	공공,기타	7.0	4.7	4.0	4.9	0.8	△30.0%
	탈루성배출	5.4	3.2	4.4	5.9	1.0	9.3%
비 에너지	소계	49.7	79.8	89.1	92.5	15.6	86.1%
	산업공정	19.9	47.1	58.3	64.8	11.0	225.6%
	농·축산	13.2	16.6	15.3	14.7	2.5	11.4%
	폐기물	16.6	16.1	15.5	13.0	2.2	△21.7%

상업, 수송, 공공 등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4백만 CO₂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43%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비산업부문의 수요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산업부문에서의 감축노력은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산업부문에서 감축활동을 할 시간을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것이 가정 등 개별 경제주체에 직접적 이익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5.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

Post-2012체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0위 국가이자, OECD 국가이며, GDP 세계 13위 국가로서 과거 교토의정서 협상시처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실 EU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가 post-2012체제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경제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시대에 지속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2008년 9월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삼고, “기후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 선도” 등 세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정책 및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종합기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기후변화 대책 기본법”을 입법 예고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체계 마련 및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언한 2009년 중 증기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은 온실가스 감축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태풍, 홍수, 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의 빈도 및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어 종합적인 기후적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기후적응을 위해

서는 먼저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측정 및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후관측소를 확대하고, 2016년에는 인공위성에 우리나라 기후현상을 측정할 장비를 탑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vulnerability)을 평가하고 이를 지도화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라 홍수 등 자연재해의 피해범위나 영향정도가 특정 지역별로 다를 것이며, 이러한 영향을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복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여기서 사전 예방적 방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여러 부처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공청회 등을 이미 실시하였고, 2008년 12월말까지는 종합적인 기후적응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결 어

기후변화는 분명 우리에게 닥친 도전과제이자 위기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기후변화 요소를 인식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급하게 실천해야 한다. 사회 모든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불편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경제시스템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곧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을 우리의 일상생활 및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반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저탄소 녹색성장이 기후변화라는 파고를 헤치는 길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도 완화시켜 주는 “기후적응”의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2009년 말까지로 예정된 post-2012 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사회·경제체제가 저탄소 사회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이룩해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존 틀로는 달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post-2012 체제 협상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져야 하겠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필수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반도에 닥칠 기후변화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적응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수년 후 또는 수십년 후 우리나라에 미칠 태풍,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